【별첨1 : 일자리 창출·유지 강화 방안】

산업 · 지역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· 유지 강화방안

2012. 10. 2

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
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우리 산업의 고용잠재력 평가

1.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? ····· 2
2. 우리 산업의 일자리 생태계 모습은 ? ····· 3
3. 미래 산업의 일자리 환경 변화는 ? ····· 4
4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정책은 ? ····· 5

Ⅲ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정책방안 ····· 6

1.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····· 7
2.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제고 ····· 9
3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개선 ····· 12

Ⅳ.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····· 13

Ⅰ. 추진 배경

□ 우리 경제의 일자리 여건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

＊ 주요국 실업률(%, OECD, '12.8) : 한(3.0), 일(4.4), 미(8.2), 독(5.8), 프랑스(9.7)

○ 다만, 최근 일자리는 50~60대 중·장년층 중심의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

＊ '11년 취업자 증감 (전년 동기비, 천명): (전체) 415, (20~30대) △105, (50대 이상) 440
·산업별: (제조업) 63, (건설업) △2, (도·소매·운수·공공서비스) 383

○ 취업 기회에 대한 소비자 전망도 오랜 기간 동안 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고용 회복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전망

＊ 취업기회전망 지수 (한은, 기준치 100): ('12.1월) 83 → ('12.5월) 94 → ('12.8월) 84

□ 세계 각국 정부는 「일자리 창출」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, 투자 확대·교육 시스템 개혁·세제개편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

○ 특히,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선결조건이라는 세계적 여론이 확산

＊ 美: Job Council Reports, 캐나다: Jobs Growth and Long-Term Prosperity, 호주: Skills Australia Business Plan 2011, 아일랜드: Action Plan for Jobs 2012

□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「일자리 창출」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·지역 정책을 일자리 창출·유지 차원에서 개편할 필요

＊ 차기 18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1순위 정책과제는 '일자리 창출'이 차지 ·현대경제硏, 엠브레인 리서치 공동조사 ('12.7월)

○ 국내 투자 활성화 유도와 중소·중견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등 산업·지역 정책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

Ⅱ. 우리 산업의 고용잠재력 평가

1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은?

◈ 전체 취업자수 증가* 등 경제전반의 일자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, 제조기술 발전 등으로 산업의 고용잠재력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

＊ 추이(만명): ('07) 2,343 → ('09) 2,351 → ('11) 2,424 → ('12.8) 2,47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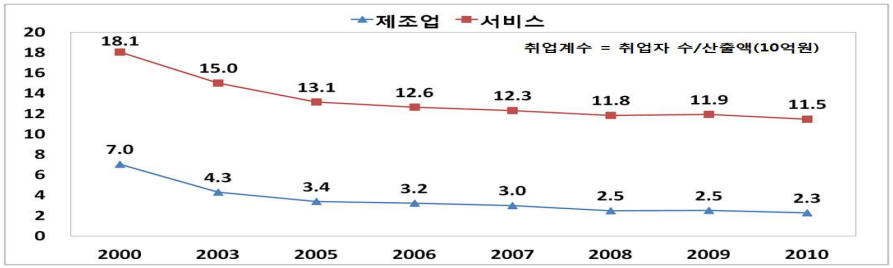
○ 고용창출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잠재된 고용여력 확보 가능

□ 제조업·서비스업 등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

○ 섬유 산업은 평균에 비해 높으나, 자동차·조선 등의 주력산업은 저조

○ 도소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은 높으나, S/W·전문서비스업(회계·법무·컨설팅)은 서비스업 평균을 하회하면서 계속 하락

＊ 취업계수 변화 ('00→'10): (섬유) 10.9 → 6.2, (자동차) 3.6→ 2.0, (조선) 6.3 → 2.4 (S/W) 12.7 → 7.4, (전문서비스) 11.6 → 9.5, (도소매) 41.3→20.1



□ 최근 10년간 중소 사업체 (300인 미만) 일자리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약 4배* 증가 (300인 미만: 152만명↑, 300인 이상: 40만명↑)

＊ 같은 기간 일자리 증가율은 31%로 비슷 (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, 고용부)

○ 중소 사업체 (제조업)의 비어있는 일자리는 약 3.2만개 ('12.7월 기준)

□ 설비투자 부진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투자의 고용창출력 둔화

＊ 제조업 해외투자추이 (억불): ('06) 55.6 → ('11) 79.5 (5년간 약 24억불 증가)

· S전자의 경우 '06~'11년 기간 국내인력이 16,173명 늘어난 반면, 해외인력은 67,453명이 증가하여 '11년 해외인력 비중이 처음으로 50% 초과

○ 국내 투자활력 회복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필요

2 우리 산업의 일자리 생태계 모습은?

◈ 최근 자영업과 전통 내수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

○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심화와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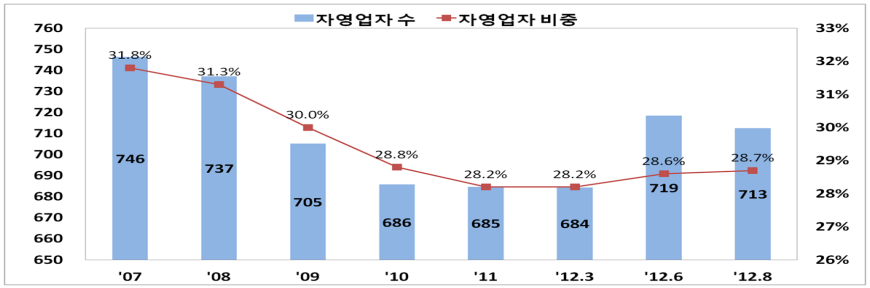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고령·여성층의 경제활동 증가로 '고용과 경기'가 엇갈리는 모습

* 작년 2분기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은 1.1%p 하락, 취업자수는 1.8% 증가

○ 국내 자영업자* 비중은 28%로 OECD 평균 (16%)을 큰 폭으로 상회

* 多진입 多퇴출구조 (연평균 60만개 生死), 낮은 수익성 (월평균 150만원 미만)

(단위 : 만명, %)



* 국내 자영업자수는 OECD 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출

□ 기업규모별·지역별로 구직자와 기업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

○ 청년층은 일자리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, 낮은 임금·비전 불투명·결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을 기피

* 취업기피 이유(중기중앙회, '12.6월): 낮은급여(39%), 고용불안(33%), 평판(17%)

○ 특히,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·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임금·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

□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개선되나, 법정 외 복리비용(주거·건강·학비보조 등)은 대·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(대기업 대비 58.7%)

* 고용형태별 (정규/비정규) 임금격차(%): ('08)12.9 → ('09)15.7 → ('10)12.6 → ('11)9.1
* 주요 항목별 복리비용격차(11년 기준, %) : (주거) 41.8, (건강) 25.2, (학비보조) 17.6 등

○ 하도급 거래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,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이 주원인

3 미래 산업의 일자리 환경 변화는?

◈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야기

○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로 인해 전통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나, 스마트혁명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증가할 전망

□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'17년경 고령사회 진입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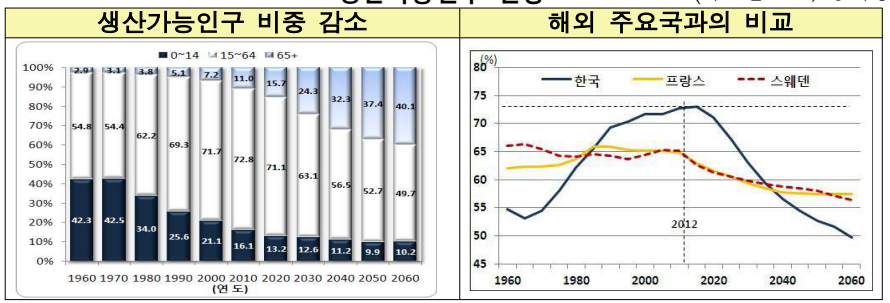
*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: ('03) 1.18 → ('05) 1.08 → ('09) 1.19 → ('11) 1.24

○ 경제 핵심 인력의 고령화는 산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'30년 잠재성장률은 1%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('12.4월, OECD 한국경제보고서)

○ 국내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우수한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, 미숙련인력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

* 해외 외국인력정책: 美·濠·日의 포인트 제도 (높은 등급에 많은 혜택 제공), 獨·佛 등 EU 블루카드 제도 (우수인력의 진입절차 간소화 등) 운영

< 생산가능인구 전망 > (자료원: UN, 통계청)



□ 미래 기술발전으로 전통 제조업만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계

○ 경제 내 일자리 창출여력을 견고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추가적인 고용흡수가 필요

○ 한편, IT 기반의 스마트혁명으로 재택근무·가상물품 (Virtual Goods: App)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

* 英 이코노미스트 ('12.4월): 'IT기반의 제조기술 혁신 (3차 산업혁명)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전망'

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은 ?

◈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고용이 회복되었으나, 체감 고용여건이 개선되기에는 역부족

*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(조원): ('08) 6.1 ('09) 11.9 ('10) 9.0 ('11) 8.9 ('12) 9.9

□ 정부 주도로 직·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노력을 추진한 결과, 전체 취업자는 금융위기 이후 '11년까지 약 81만명 ('08~'11) 증가

○ 다만, 상용직 근로자 증가와 비정규직 비중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은 미약

○ 일자리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사업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, 정책의 시너지 성과는 부족

□ 그간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산업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나, 일자리 창출형 패러다임 구축 노력은 다소 미흡

○ 「산업기술인력 역량강화사업*」 예산은 산업 R&D 예산 (4.7조)의 5.2% 수준에 불과하고,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

* 총 2,464억원: 일반 (949), 정진기금 (826), 에특·전력기금 (417), 광특 (272)

○ 또한, 산업체 수요에 근거한 균형있는 산학협력사업 발굴에는 소홀

〈 종합적 평가 〉

◈ 우리 일자리 여건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와 국내 투자 활력 위축으로 고용개선 추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

○ 또한,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지속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생태계 악화 가능성 상존

◈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일자리의 수는 증가하였으나, 체감 고용여건 개선은 미흡

○ 산업·지역 정책 차원에서 구직자 눈높이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

Ⅲ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정책방안

"국민이 꿈꾸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산업생태계 구현"

〈 추 진 방 향〉

◈ 이명박 정부가 '유종의 미'를 거두고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모든 산업·지역 정책적 역량을 총 집중

○ 단기적으로는 중소·중견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, 국내 투자 활력 회복, 부처간 일자리 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

◈ 중·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일자리 창출 유망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제적 발굴·육성에 주력

추진 전략	세부 추진과제
Ⅰ.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	1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제대로 알리기 2 매력적인 기업 근무환경 만들기
Ⅱ.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 제고	3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고용 창출형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5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기반 확충
Ⅲ. 일자리 친화형 인프라 구축	6 지자체 주도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7 부처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 확대

전략-1.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1-1 우수 중소 · 중견기업 제대로 알리기

□ **좋은 기업과 구직자간 매칭 지원** (12.下, 지경·고용부)

○ 협력사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채용박람회와 지역별로 구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캠퍼스 리크루팅 확대

* 금년 하반기 중 구미·창원·광양·천안 등에서 15회 내외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, 사전매칭을 통해 실제 채용 연계율 제고

○ 구직자의 학력·전공·경력 등 개인별 전문성을 분석하여 취업 가능한 업종·기업群·소재지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

*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(SC)의 취업상담기능을 보강

□ **중소·중견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** ('12.下, 지경·고용부·중기청)

○ 전경련 (중기협력센터)과 중기중앙회 (인력지원센터)가 상호 협력하여 기업로고 등 '대기업 브랜드 공동 활용 운동' 확산

○ 근로조건·성장성·미래비전 등 근무환경이 우수한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DB 구축 및 취업 정보 제공

* '중견기업 포탈'과 '스마일스토리보드' 오픈, 일하기 좋은 기업 정보 앱 보급 등

□ **인력난 해소를 위한 「기업중심의 산학협력」 확대** ('12.下, 교과지경·고용부)

○ SC의 취업연계·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「新 SC 2.0 체제*」 구축

* SC 1.0 : 협회·대기업 위주 구성, 단순 회의체로서 사업 추진력 미약
→ SC 2.0 : 중소·중견기업 중심 (구성원의 60% 이상), 취업상담 기능 보강

○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활성화

* 산학협력 선도기업 육성, 청년취업아카데미, 일-현장중심 특성화고 개편 지원 등

○ 대학 산학협력단 內 가족회사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유도하여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취업을 연계

* 센터당 가족회사전산망 구축,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등 지원

1-2 매력적인 기업 근무환경 만들기

□ **대-중소기업 근로자간 보상격차 완화** ('12.下, 지경부, 동반위)

○ 대기업이 「동반성장 투자재원」으로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(기숙사·어린이집 등 시설투자) 자금 출연시 '동반성장지수' 평가 가점 부여

* 대기업의 보상격차 완화 노력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반영하기 위해, 복리후생 분야를 '동반성장지수 가점항목 (동반성장위원회 주관)'에 포함

□ **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** ('12.下, 지경부, 중기청)

○ 매출액, 고용인원 등의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 대상으로 R&D 등 정부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

* 「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(중기청 추진예정)」과 연계 추진

※ 청년 구직자의 중소·중견기업 기피요인 ('12.4월, 한국산업기술진흥원)
- 낮은 임금·복리후생 (39.5%), 불투명한 미래비전 (30.5%), 고용불안 (19.2%)

□ **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 ('12.下, 교과지경·고용부, 중기청)

○ 산단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「산학융합지구」 사업 확산 (하반기 중 1개 추가 지정)

* '11년: 반월·시화, 구미, 군산 등 3개 지구, 12년 上: 대불, 오송 등 2개 지구

○ 중소·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전제로 이공계 대학(원)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'산업기술장학금' 지원

* 산업기술장학생 입사 전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현장 실무감각 향상 및 취업예정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

○ 재직자가 능력개발을 통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* 학위와 무관한 '기업대학' 설립, 기술교육 위주의 '한국산업기술사이버대학' 설립 검토, '중소기업 계약학과' 확대 등

전략-2.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 제고

2-1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
□ **고용 유발을 위한 국내 투자활력 제고** (12.下, 기재·지경부)

○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별 '지원전담반'과 PM을 통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, 범부처 차원의 조속 해결 지원

* 예시: P社 신규공장 건설시 외투지역 지정요청, S社 유기화합물 공장건설시 진입도로 확보 등

○ 국내 복귀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U턴 기업*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요건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인센티브 개선

* 전북 (익산) 지역에 14개 주얼리 기업 U턴 ('12.8월, 3천명 고용창출 전망) → 금년 하반기 중 패션·의류·신발 등의 업종 추가 유치 지원

○ 민자 발전소·가스공급기지 확충,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및 태양광 조기투자 유도 등 에너지 분야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

□ **일자리 창출형 연구개발 (R&D) 투자 확대** ('12.下, 지경부)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산-학 공동연구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「실습연구원 제도」 도입 추진

* 기업은 방학 중 이공계 대학생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장교육을 하며 인건비(월 150만) 지급

○ R&D 전주기에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 (지원기간은 2년, 최대 50억원 이내/건)

□ **지역의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** ('12.下, 기재·지경·고용부)

○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용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 지역 예산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

* 지역별 고용목표 달성도 (10% 배점)를 고려하여 지역사업 예산을 차등 배정

○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활성화

○ 한수원·발전자회사의 구매계약시 신규 고용증가 업체를 우대하고, 지역 발전소의 기능·운영 일자리에 해당지역 학생 우선 채용*

* 발전회사 – 지역대학·특성화고간 MOU체결, 인턴쉽 제공, 장학금 지원 등

○ 국민생활 직결사업과 新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인력확충 검토

2-2 고용 창출형 산업정책으로의 전환

□ **일자리 창출을 위한 「산업 비전·전략 2020」 수립 추진** ('12.下, 지경·고용부)

○ 산업별 시장전망·고용효과 등을 정밀 분석하여 '미래 일자리 창출 유망산업'을 선정하고, 산업별 지원방안 마련

* 「일자리 창출 산업 기획단」을 구성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 ·분야별 글로벌 시장전망,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추진

* 고용부 '국가고용전략 2020' 및 '중·장기 인력수급 전망'과 연계

○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新 제조업 및 파생·융합 서비스 분야 지속 발굴

* 고용창출효과가 큰 再제조산업육성을 위해 인증·보급 확대· 네트워크 구축 추진 (국가별 고용규모: 韓 1.1, 日 1.8, EU 16, 美 48만명)



* CRO (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), CMO (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)

□ **「업종별 일자리 예보제」 시스템 구축** ('12.下, 지경·고용부)

○ '업종별 단기 인력수급전망 (고용부)'과 연계하여 「주요 업종 (유통업 포함)의 채용계획과 인력부족 전망*」 공동 발표 추진 (반기별)

* ① 기업 (대중소), ② 직종 (사무연구개발), ③ 근무형태 (정규여부), ④ 학력 (고대졸) 등

○ 산업 관련 전체 예산사업을 일자리 창출목표와 연계·평가

* 일자리 창출실적과 R&D·지역예산 연계, FDI 유치시 고용계획을 보조지표로 도입

2-3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기반 확충

□ **창업 등 청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반 조성** ('12.下, 교과·지경·고용부, 중기청)

○ 고교·대학 교육과정에 창업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창업 교육 전담교원을 양성·지원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

○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멘토링과 연계한 창업사업화 프로그램* 확대

* 창업 준비기간 또는 초기에, 일정기간(3~6개월) 창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「사관학교식 창업 지원사업」 신규 도입 (중기청)

○ 글로벌 Job Market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별 일자리 정보의 발굴·제공과 소규모 단위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(Kotra·무역협회·산업인력공단)

* Kotra 해외 지사장 업무평가 등에 해외 취업지원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

□ **여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 ('12.下, 지경·고용부, 중기청)

○ 대기업 직영점 內 여유 공간을 활용한 여성창업 (꽃, 커피) 확대 (Shop in Shop)

* 대기업 및 협력사 명퇴자·산재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저가의 공간을 지원하고, 정부는 사전 교육 기회 제공 (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 활용)

○ 기념품·토산품·악세사리 등을 생산하기 위한 '고부가가치 가내수공업 분야*'를 발굴하여 자금과 판로를 지원 (Shop in House)

* 제품 판매공간은 낙후된 전통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

○ 문화·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한 「미니 복합타운」 공급을 확대하고, QWL (행복산단)사업 추진시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확충

□ **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확대** ('13. 上, 지경·고용부)

○ 청소·가사·육아 도우미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프랜차이즈化를 유도하여 취약계층의 근로를 확대

○ 지역의 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해 퇴직여성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도모

* 신재생 설치확인·A/S 등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('13.上)

전략-3. 일자리 친화형 인프라 구축

□ **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** ('12.下, 지경·고용부·중기청, 지자체)

○ 지자체와 지방 중기청, TP, 지역상의,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혁신 지원기관 공동으로 구인·구직 지원 네트워크 확대

○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 등 구직자와 지역기업간 일자리 매칭 강화 ('청년 채용의 날' 행사 등)

* 워크넷(고용부), 테크포스넷(지경부)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중기청)간 DB 연계 검토

※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적극 활용

□ **부처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 확대** ('12.下, 교과·지경·고용부)

○ LINC사업(교과부)과 광역선도사업(지경부)의 연계를 통해 산·학 공동R&D지원, 대학생 현장실습, 지역 우수기업 정보제공 등 추진

* LINC대학에 제공할 지역우수기업 정보DB 구축('12년 1,000개 → '14년 3,000개)

○ 「탐방 → 인턴쉽 → 취업」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청년층의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추진

* '희망이음 프로젝트(지경부)', '지방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(고용부)' 등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'중소기업 청년인턴제(고용부)'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

○ 기업이 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고용부 '내일배움카드제' (실업자/비정규직 대상) 운영시 사업주의 인력수요 반영

* (지경부) 산업·지역별 훈련수요 발굴 → (고용부) 훈련과정 심사시 반영

□ **「산업기술인력 역량강화사업」을 고용연계형으로 개편** ('12.下, 지경·고용부)

○ 기존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 연계·기업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

○ 신규 사업 기획시에는 주관기관에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최신 기술과 인력수급동향 등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유도

* 사업 전담기관이 산업·인력 수준별 가이드라인 (학위 및 현장교육과정 등) 제시

* 고용연계형 개편시 고용부의 인력양성플랫폼 및 취업지원시스템 활용 연계

Ⅳ.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

1. 기대효과

□ 내년 상반기까지 약 **5만명 (+α)**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보

○ U턴기업 지원, 복합리조트 유치 등 투자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지역·R&D 사업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

* 현재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(3개) 유치시 '20년까지 약15만명 일자리 창출 전망

○ 우수 중소·중견기업을 제대로 알리고, 근무환경의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중소·중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

□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유기적인 협력·연계를 통해 시너지 제고

☞ 모든 산업·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로 전환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국민 모두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부여

2. 추진계획

□ 일자리 창출·유지 전략의 효과가 구직자와 기업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개편, 관련 법령·제도정비 등의 후속절차 신속 마무리

○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,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·보완

□ 중·장기 관점에서 산업의 체질을 일자리 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,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

【별첨2 : 내수활성화 방안】

지역 · 서민 · 중소기업이 힘나는

내수 활성화 방안 (3活)

2012. 10. 4.

지식경제부
Ministry of Knowledge Economy

≪ 목 차 ≫

Ⅰ. 추진 배경 - 최근의 내수 동향 1

Ⅱ. 내수활성화 기본 추진 방향 2

Ⅲ. 내수활성화를 위한 「3活 과제」 3

1. 지역경제 활력 제고 - "활력있는 우리 지방" 3

2. 서민 체감경기 고양 - "활짝웃는 우리 이웃" 7

3. 중소기업 여건 개선 - "활기찬 우리 회사" 9

Ⅳ. 향후 추진 일정 12

Ⅰ. 추진 배경 - 최근의 내수 동향

◇ 투자 감소세 전환, 소비의 회복 지연 등 내수 부진 우려 지속

◇ 특히, 지역·소상공인·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의 악화 두드러짐

□ 소비·설비투자 등의 내수지표는 장기적인 둔화 추세 지속

○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는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며 정체 상태

- 경기불안 및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심리의 개선을 제약

* 소매판매(전기비,%): (`11.4Q)△1.3→(`12.1Q)1.0→(2Q)0.2→(7월)3.5→(8월)△3.0
* 소비자심리지수(한은) : (`12.1월)101→(5)105→(7)100→(8)99→(9)99

○ 회복조짐을 보이던 설비투자도 2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

-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

* 설비투자(전기비,%) : (`11.4Q)△5.0→(`12.1Q)11.3→(2Q)△3.3→(7월)1.5→(8월)△13.9
* 8-10월의 기업경기전망지수(한은)는 `09년 상반기 이후 최저 수준

□ 특히, 지역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경기여건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

○ 생산 둔화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약화 추세인 가운데, 특히 소비는 대부분의 지역이 작년 수준 하회 (`12.2Q 기준, 한은)

* 지방의 2Q 대형소매점판매: 전년비 0.6%↓(강원, 대구경북 외 모든 지역이 감소세)
* (전년비 증가율, `12.1Q→2Q) [제조업생산]4.4→1.6%, [수출]1.6→△2.2% (이상 한은)

○ 경영성과 정체, 영세성 심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약화

* 소상공인 1인당 월매출액 : (`10.8)1,590→(`11.8)1,484→(`12.8)1,407만원

○ 2분기 이래 중소기업의 체감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, 다수의 기업이 전년에 비해 설비투자 축소를 계획

* 중소기업 경기전반 실적지수: (`11.9월)86.6→(`12.3)85.7→(9)81.7(중기중앙회)
* `12년계획 설비투자증감률(%): 대기업 6.8, 중견기업△4.6, 중소기업△11.5(정책금융공사)

II. 내수활성화 기본 추진 방향

◇ **지역·서민·중소기업** 3대 분야의 체감 내수 개선에 초점

◇ 재정제약을 감안, 제한적 재정투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 위주로 발굴 (민간투자 진작, 규제 완화, 절차 개선 등)

◇ 지속적인 현장점검 활동, 업계와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 계속 유지

≪내수활성화를 위한 「3活 과제」≫

1 지역경제 활력 제고 *"활력있는 우리 지방"*	1.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 활성화 2.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강화 3. 지역 인프라확충 사업 조속 진행
2 서민 체감경기 고양 *"활짝웃는 우리 이웃"*	1. 전통시장의 활성화 촉진 2. 특수한 민생지원 수요 배려 확대 3. 일자리창출 통한 서민경제 토대 구축
3 중소기업 여건 개선 *"활기찬 우리 회사"*	1. 중소기업 비중 높은 분야 여건 개선 2. 기술역량 강화 위한 경영자문 지원 3. 현장점검 및 업계와의 공조 강화

III. 내수활성화를 위한 「3活 과제」

1 지역경제 활력 제고 - "활력있는 우리 지방"

◇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 리모델링, 입주규제 완화, 기업 애로지원 등의 종합 지원책 마련

◇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 및 행정절차 합리화

◇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조속 추진 통한 지역경기 진작 도모

1.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의 활성화

1 산업단지 전면 리모델링·첨단화

○ 산단 복합공간화 프로젝트(QWL밸리)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로 전면적 확산 착수, "산업단지 르네상스 시대"를 개막

※QWL밸리사업: 생산기능 위주의 노후산단 ⇒ 일터/배움터/즐김터로 재창조
- 일 터 : 산단 내 기반시설 고도화, 도심과 연계 위한 인프라 확충 등
- 배움터 : 산단 내 대학캠퍼스·기업연구관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
- 즐김터 : 근로자의 문화·체육 체험기회 확대 및 공간 제공

- 지역경제 중요도 높은 산단부터 리모델링·첨단화 우선 진행

* 시범사업종료(~13.6월) → 시도별 거점 확산 → 전국 확산

- 사업별 성격에 따라 재원조달(민간/정부) 방안 다양화

* 공익성사업(교육·연구기능 확충, 산단 기반시설 개선): 정부 출연/보조 사업
* 수익성사업(주거시설): 용도변경,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자유치

⇒ 프로젝트 내 민간투자자금의 유인, 정부의 SOC 투자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

▶ 산단을 3터(일터·배움터·즐김터)로 리모델링한 대표모델* 제시(11월)

* 반월·시화 산단에 Biz센터, 산학융합지구, 어린이집, 호텔·편의시설 등을 종합 조성 중

2 기업 등의 산단 입주 관련 규제 완화

≪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기업 입주 제한 사례≫

① A社는 산업단지에 여유부지가 있음에도 불구, 업종별 입주구역 구분 제도에 걸려서 입주가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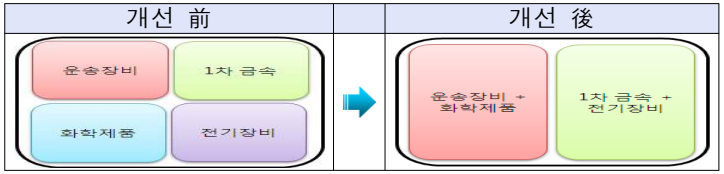
② 공학R&D업체 B社는, 입주가 가능한 지식서비스업종이 아니어서 입주 제한

③ 전기와 증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'지원기관'으로 분류, 입주가 제한 (반면,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는 입주 가능)

○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별 입주구역 구분을 없애고, 통합 배치를 허용

※ (現제도) 업종별 배치계획과 다른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旣수립된 배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나, 이는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소요

< 제도개선 前·後 비교 >



○ 제조업 지원효과, 고용창출효과, 투자수요 등이 큰 지식서비스 5개 업종*에 대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추가로 허용

* ①공학 연구개발업, ②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, ③경영컨설팅업, ④번역 및 통역서비스업, ⑤전시 및 행사대행업

※ (現제도) 출판업, 전문디자인업 등 11개 업종(전부 혹은 일부)에 한해 입주 가능

○ 열병합발전소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에 따른 산업단지에의 영향 분석,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 후 입주 허용 추진

▶ 업종별 입주구역 폐지, 지식서비스의 추가 입주 허용 관련 산집법 시행령 개정 (12월) * 산집법 시행령 43조, 6조②항

▶ 열병합발전소 입주 허용 위한 산집법 시행령 개정 (`13년)
* 산집법 시행령 6조 ⑤,⑥항

3 산단 입주 지역기업의 애로 적극 해결

○ 산단 내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사업비의 집행을 가속화, 조기에 지역기업에 지원토록 추진

* 9월말까지 총 예산(580억원)의 75%(435억원) 이상 집행 (`11.1-9월 집행률: 66%)

- 특히, 내수진작과 상관관계 높은 마케팅지원 분야의 지원 강화

* 공동전시회 및 시장개척단, 바이어상담회, 공동 홍보, 마케팅컨설팅 등

▶ 클러스터 사업비 조기집행 목표 달성 (~12월) * 9월까지 75% 집행

2.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강화

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통한 기업 지원 확대

○ 지자체별 지원가능 특화업종을 4개 업종으로 확대 (종전: 2개)

* 부산, 대구 등 13개 시·도에서 지원대상 특화업종 4개 선정 완료

○ 보조금지원 타당성 평가시 투자규모에 대한 기준을 완화

* 투자규모 평가시의 만점기준을 "200억원 이상"에서 "100억원 이상"으로 완화

※ 상기 내용은 9.14일 지자체에 통보 완료

2 공장설립시의 행정절차 간소화

※ 기업수요조사 및 실태점검(공무원이 신청서 직접 써보기) 등을 통해 개선점 발굴

○ 공장설립 인·허가 신청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

-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, 항목별 기재요령 제공 및 양식 표준화

○ 산집법상 인·허가 의제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행을 개선 (관행적으로 중복 요구하는 서류제출 관행 금지)

- 단계별 필수 제출서류 명확화, 지자체의 인·허가 관행 개선 노력 평가(성공사례 발표 등), 지자체 공무원 교육실시(연4회) 등

⇒ 공장설립시 필요기간·절차의 50% 이상 단축 기대

▶ 인·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(12월)

3. 지역 에너지인프라 확충 사업의 조속한 진행

1 지역 미착공 발전소의 조기착공 유도

○ 미착공 발전사업, 특히 지방 사업(3건)이 조기에 착공 가능하도록,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지원

⇒ 지역 내 총 7~8조원의 투자, 4~5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

※ 100만kW급 석탄화력발전기 2기 건설시, 건설공기는 평균 50개월 소요되며, 약 2.5조원의 투자비와 日평균 1,500명의 고용창출효과 있음

2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확대

○ 전국 산업단지의 공장지붕, 부설주차장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"산단 Sun Roof Belt" 프로젝트 추진

- 산단공 주관으로 창원지역에 시범사업(15M 규모, 500억원 조성) 실시 후, 전국 산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
* [`13년] 시범단지(1개소) → [14년] 확산단계(10개소) → [15년] 정착단계(24개소)

○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, 자체적 전력 생산·저장·소비가 가능토록 하는 "녹색자립섬 구축" 실증사업 추진

- 태양광·풍력·에너지저장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(EMS) 구축

- 3년 내 실증사이트 3개소(독립형1+연계형2) 실증운전 목표로 추진

▶ 창원산단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(12월), 설비 본격 설치(`13년~)
▶ 녹색자립섬 실증사이트 후보지 조사 및 선정('12.10월~'13.3월)

2 서민 체감경기 고양 - "활짝웃는 우리 이웃"

◇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통한 전통시장 체감경기 개선
◇ 태풍피해 주민,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 특수한 민생지원 수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
◇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의 경제적 기반 개선

1. 전통시장의 활성화 촉진

□ 汎지경부 차원의 온누리상품권 적극 구매 및 활용

○ 지경부와 산하 공공기관(60개)의 `12년 총 온누리상품권 구매규모를 175억원*으로 확대 (`11년 구매규모 : 167억원)

* 추석 기간 중 구매액 30억원 포함

※[참고] 삼성(1,400억원), 현대차(230억원), LG(110억원) 등 기업들은 총 2,247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,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으로 지급

○ 부내 간부(장·차관 포함)들이 전국 12개 전통시장을 방문,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소외계층에 전달

* 장관(창원 가음정시장, 9.23), 1차관(하동공설시장, 9.26), 2차관(군산공설시장, 9.26) 등

□ 추석 연휴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수요 창출

○ 추석 기간, 세일·경품·특가판매 등 판촉 집중 실시(88곳, 108회)

○ 추석 수요가 많은 식용유, 양념류 등 특가상품을 시중가의 70~80% 수준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하여 특가판매 지원

□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 제고 방안 발굴

○ 온누리상품권 취급 은행 확대('11년 9개 → '12년 우리·농협 추가)

○ 시경원·상품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시장·점포 정보 제공

▶ 지경부·공공기관의 `12년 상품권 구매계획(175억원) 이행 (~12월)
▶ 온누리상품권 취급은행 확대 (12월)

2. 특수한 민생지원 수요에 대한 배려 확대

□ 태풍 피해 주민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등의 복구 조기 마무리

○ 정전 피해 가구(270만호)에 대해 1-2일만에 전가구 송전 완료

□ 발전소 주변 지역의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, 현행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

□ 사회적 약자 등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R&D과제를 추진하는 "사람 중심의 따뜻한 R&D 및 활용·보급전략" 수립

○ 현재 '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'을 통해 신규과제 추진 중

※`12년 신규과제(안)
①국민안전 방범창호시스템 ②어린이 보호 위한 비상호출기기
③밀폐공간작업자 작업환경 안전점검시스템 ④해파리 퇴치관련 기술개발

▶ "따뜻한 R&D" 관련 사업자 선정 후, 과제 착수 (11월)

3. 일자리 창출 통한 서민경제 토대 구축

※상세내용은 「산업·지역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·유지 강화방안」 참고

□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매칭을 지원,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○ 동반성장 채용박람회, 지역별 캠퍼스 리크루팅 등의 확대

□ 지역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

○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용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 지역 예산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

○ 지역 발전소의 기능·운영 일자리에 해당지역 학생 우선 채용

* 발전회사 – 지역대학·특성화고간 MOU체결, 인턴쉽 제공, 장학금 지원 등

□ 퇴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확대

○ 생활밀착형서비스(청소·가사 등)의 프랜차이즈化 유도, 사회적 기업의 운영 등을 통해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(예시: 신재생 A/S)

3 중소기업 여건 개선 - "활기찬 우리 회사"

◇ 뿌리산업, LED조명, 조선/해양기자재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야의 시장창출 촉진 및 경영여건 개선

◇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를 자문위원으로 알선

◇ 지속적 현장점검 및 업계와의 공조 강화 통해, 기업 애로의 조속한 해결에 상시적으로 매진

1. 중소기업 비중 높은 분야 여건 개선 - 뿌리산업, 조선/해양기자재, LED조명 등

□ 단체 이전을 희망하는 뿌리기업들에게 부지 및 이전자금 등을 지원하여, 당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·증설 투자 유도

○ 입지문제 해소를 위한 지경부·지자체·업계간의 협의 촉진

○ 단체이전 뿌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방안 마련 (중기청 협의)

□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, 시장진출 등의 지원 확대

* 대형조선사의 플랜트 수주 확대 추세에도 불구, 기자재 국산화율은 20%에 불과

○ 기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, 재직자·기업 대상 교육과정 개설

○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촉진을 위한 설명회 등 지원

□ LED조명 초기시장 창출 위해 공공기관의 LED조명 교체 독려

○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*을 통해 LED조명 교체 지원

* ('11) 82억원 → ('12) 319억원, 정부와 공공기관이 50:50으로 매칭

▶ 단체이전 뿌리기업의 부지확보 및 자금지원 방안 마련 (12월)

▶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완료(10월), 해양플랜트의 특성화대학교 내 신규 반영 (`13년~)

▶ 공공기관 LED 교체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(12월)

2.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위한 경영자문 지원

□ 기술창업 CEO 출신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멘토로 활용될 수 있도록, 인재풀 관리 및 자문 알선

○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(전경련), 중견기업 기술지원멘토단(지경부, `13년출범) 등의 자문위원으로 상기 인재들을 위촉

※[참고]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
○구성: 대기업 CEO·임원, 중견기업 CEO 5년 이상 경력자인 자문위원 131인
○사업: 비즈니스 멘토링, 경영닥터제, 1:1 기업전담멘토제, 온라인자문 등

- 특히,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도산한 CEO들을 적극 활용,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유능 인재들에게는 재기의 발판 제공

* 금융위기로 다수의 기술창업CEO가 신용불량자로 전락,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사장

▶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(전경련) 신규자문위원 위촉 (12월)
▶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(지경부) 공식출범 (`13년~)

3. 지속적 현장점검 및 업계와의 공조 강화

□ 업종별 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현장점검 활동 실시

○ 지난 9월 지경부의 지역별 동시다발적 현장방문의 후속으로, 업종별 협회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점검활동 진행

※[참고] "현장공감형 지역기업인 간담회"(9월, 지경부)
○ 장·차관 포함 간부들이 지역 중소기업,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,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현장에서 점검
○ 9월2주부터 시작, 추석 전까지 진행
* 장관 9.23(창원), 1차관 9.26(하동), 2차관 9.26(군산) 등

○ 對정부 건의사항 조사, 내수활성화 과제 추가 발굴 및 해결 추진

□ 기업·경제단체와의 공조를 강화, 내수활성화 위한 공동 노력 경주

○ 기업별로 애로에 직면한 투자프로젝트 파악 후, 지원전담반을 구성하여 애로해결 밀착 지원

*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, 중견기업연합회 통해 기업별 투자애로 프로젝트 조사(9월)

○ 기업 애로의 신속한 발굴 위해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 공고화

* 경제5단체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응, 기업 경영 애로의 신속한 해결 위해 공동으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(8.28)

○ 기업의 투자·고용 확대를 당부하는 동시에, 기업 사기 진작을 위한 여건 조성 활동도 병행 (기업가정신주간 개최 등)

□ 현장점검 등으로 접수된 기업의 애로·건의사항 중 미결과제를 분야별(입지·금융·인력 등)로 종합·정리 후 개선방안 모색

▶ 업종별 기업밀집지역 현장점검활동 진행 (10~12월)
▶ 기업 사기 진작 위한 기업가정신주간 개최 (11월)

IV. 향후 추진 계획

과제분류	과제명	추진 기한	비 고
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의 활성화	산단 리모델링 대포모델 제시	11월	
	업종별 입주구역 폐지, 지식서비스 추가 입주 허용 관련 산집법 시행령 개정	12월	
	열병합발전소 입주 허용 관련 산집법 시행령 개정	`13년	
	클러스터 사업비 조기집행 목표 달성	12월	
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강화	인·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위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	12월	
지역 에너지인프라 확충 사업의 조속한 진행	썬루프 프로젝트 관련, 창원산단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	12월	
	창원산단 태양광설비 본격 설치	`13년~	
	녹색자립섬 실증사이트 후보지 선정	`13.3월	
온누리상품권의 판매·유통 활성화	지경부·공공기관의 `12년 상품권 구매계획 이행	12월	
	온누리상품권 취급은행 확대	12월	
특수한 민생지원 수요에 대한 배려 확대	"따뜻한 R&D" 관련 사업자 선정 후, 과제 착수	11월	
중소기업 비중 높은 분야의 여건 개선	단체이전 뿌리기업의 부지 확보 및 자금지원 방안 마련	12월	
	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완료	10월	
	해양플랜트의 특성화대학교 내 신규 반영	`13년~	
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위한 경영자문 지원	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신규자문위원 위촉	12월	
	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 공식출범	`13년~	
업계와의 공조 강화	업종별 기업밀집지역 현장점검활동 진행	10~12월	
	기업가정신 주간 개최	11월	